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87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이현숙의원 외 13명	발의년월일	2019.03.20.
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심경석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 서초구 체류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치안봉사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체 치안 기반강화 및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명 변경
- 나. 치안봉사단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다. 치안봉사단의 조직 및 구성(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라. 치안봉사단의 임무(안 제5조제2항 신설)
- 마. 치안봉사단의 설립·등록신고 등(안 제7조제5항 신설)

바. 치안봉사단의 활동 경비 지원 등(안 제8조제4항 신설)

사. 중복지원의 금지(안 제13조 신설)

아. 치안봉사단 등록·운영 관련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제4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예산편성 필요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 의견

가. 제정 배경

- 먼저, 동 조례안의 목적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운영 및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 치안 기반강화 및 외국인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중 제7호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에 포함되는 바, 상위 법령과의 상충문제 또는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2017.12.2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내체류 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언어·문화적 소통의 제약으로 재난약자로 분류되는 외국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음.¹⁾
- 국내체류 외국인은 결혼, 이주, 노동, 관광, 유학 등 다양한 유입 정책으로 2006년 91만명에서 2016년 기준 205만명²⁾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특히 외국인은 언어 소통과 문화적인 차이로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안전관리대책’에서는 전국 95개 경찰서 별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숙소의 시설 개선 등 총 24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음.
- 현재 활동 중인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서초경찰서에 소속된 봉사단체로서 2019년 현재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내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활동 및 대처 교육, 관내 외국인 관련 정보교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1) 2017.12.28일자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참조

2) 법무부 통계 기준

- 한편, 서울시의 외국인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1960년에 8,772명으로 전체 인구의 0.35%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도에 61,920명으로 40년간 606%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0.59%에 달하였음. 특히 2010년에는 262,902명으로 불과 10년 만에 325% 급증하였고 2017년에는 267,153명으로 전체 인구의 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서울특별시 외국인 인구 추이>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7년
8,772명 (0.35%)	10,463명 (0.19%)	8,816명 (0.1%)	9,327명 (0.08%)	61,920명 (0.59%)	262,902명 (2.48%)	267,153명 (2.63%)

주) 괄호안은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율임

- 서초구의 경우 2017년 기준 외국인 수는 4,299명¹⁾이며 서초구 인구의 0.9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399명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프랑스인(563명)과 미국인(517명)이 각각 13.1%와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참고로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운용하는 서울시 자치구는 광진구, 강동구, 동작구 등 총 11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1) 2018 서초 통계연보 기준

나. 주요 내용 검토

1) 조례의 제명 변경

- 본 개정조례안의 목적은 외국인 치안봉사대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음.

2) 정의 신설(안 제2조)

-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활동 대상은 재한 외국인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외국인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정의를 신설함.

3) 치안봉사단의 조직 및 구성(안 제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치안봉사단은 구에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하며, 치안봉사단원은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단은 지역사회 생활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함.

4) 치안봉사단의 임무(안 제5조제2항 신설)

- 치안봉사단의 임무는 관할 경찰서와 의무적으로 사전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취약지역 범죄 예방캠페인·순찰활동, 외국인 피해사례 등 범죄피해 사실 확인 시 경찰 신고, 외국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요령 홍보 등 범죄 예방활동 등 4가지 임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5) 치안봉사단의 신고 등(안 제7조제5항 신설)

- 치안봉사단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 자율방범대의 신고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함.
-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서식에 치안봉사단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함.

6) 경비 지원 등(안 제8조제4항 신설)

- 치안봉사단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자율방범대 경비 지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함.

7) 중복지원 금지(안 제13조 신설)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지원을 통해 서초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Ⅲ. 참고자료

1.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